

기업윤리 브리프스

3

국민권익위원회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교칭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기업의 역할

질문 1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제목에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1년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시행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되고,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법률 개정을 진행하였고, 올해 1월 25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법의 특징은 신분상,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기업의 책임 강화입니다.

특별보호조치를 신설해 실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형벌이나 징계 뿐 아니라 불리한 행정처분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자의 불이익 상태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개인의 종업원 등이 불이익 조치 등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용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처벌하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물론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익신고 보상금 목적의 전문신고자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했습니다. 반면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강화했습니다.

질문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지난 해 세계적 자동차 제조업체인 독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나면서 각국 정부는 판매 금지, 리콜,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폭스바겐의 기술자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폭스바겐은 직원들을 상대로 앞으로는 내부신고자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면서 사태 수습에 나서고 있다지만, 이미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만약 폭스바겐이 내부 공익신고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태를 조기에 수습했다면, 지금과 같은 금전적·비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기업은 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부신고자를 배신자나 조직 부적응자로 바라보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복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기업이 공익신고 처리기능을 갖추어 자체적으로 공익침해행위를 제거·예방함과 동시에, 임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준법 의식을 습관화시키고 내부신고의 중요성에 대해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내부신고의 정당성, 신고채널, 보호내용, 구제절차, 이용방법 및 그 효과 등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신고자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혜경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윤경萬里

:: 국 내 ::

전경련, 청탁금지법 시행 앞두고 윤리경영 제고방안 논의

전경련은 2월 26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2016년 제1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들의 윤리경영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함께 해외 선도 기업들의 윤리경영 사례와 윤리경영 지표 등에 대해 살펴보고, 회의 참석 위원들은 윤리경영 제고방안으로서 객관적인 목표 설정과 성과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전경련 사회본부장은 “올해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JSI)와 GRI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부패 및 뇌물수수 등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전했다.

참고: <http://www.fnnews.com/news/201602260811104670>

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선포식 개최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2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부, 산업관련 단체 및 60여개 기업 대표들과 함께 ‘페어플레이 반부패 서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산자부, 금융위, 권익위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반부패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인 ‘페어플레이어클럽’의 1차년도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 대표, 임직원들이 준법·윤리경영을 선포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이니셔티브가 후원하는 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추구하는 정부와 기업의 공동노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참고: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218001100>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한 연장 결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란, 동반성장위의 권고에 따라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3년 간 이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는 제도이다. 2011년 도입된 이 제도로 73개 업종이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올해 이중 18개 업종의 시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월 23일 열린 제39차 동반성장위 본회의에서 제과점업을 비롯한 7개 업종에 대해 시한을 늘리기로 결정하여 올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62개가 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정이어서 대기업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와 이에 반대하는 산업계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참고: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25799



행안소거

개인 기부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Enhancing Private Donor Partnerships)

아시아개발은행이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개인 기부 파트너십 강화 워크숍을 개최

- 주최: 아시아개발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 일시: 3월 10일 - 장소: 서울 밀레니엄 힐튼 호텔

여성역량강화원칙 이벤트

(2016 Women's Empowerment Principles Annual Event)

양성평등을 위한 비즈니스 파트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연례 이벤트

- 주최: UN Global Compact & UN Women - 일시: 3월 15-16일
- 장소: Trusteeship Council Chamber, United Nations Headquarters

:: 해 외 ::

국제표준화기구, 뇌물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37001) 개발 중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국제표준인 ISO 37001(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을 개발 중에 있다. 합의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조직마다 뇌물방지를 위한 실행 체계의 수준이 상이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조직의 뇌물방지 대책이나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에 대한 국제적인 수요를 반영한 결과이다. 현재는 회원국으로부터 표준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는 단계이며, 올해 말경에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ISO 37001이 제정되면 전 세계적으로 기업 간 거래와 공공·민간사업 수행에서 뇌물방지경영시스템에 대한 실행 요구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www.iso.org/iso/home/standards/sc37001.html?KFR20160118004600094_HTMIL?input=1195m

아디다스와 네슬레, 부패스캔들 일으킨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후원 중단



IAAF 전 회장 '라민 디악'은 회장 임기 중 거액의 뒷돈을 받고 러시아 육상선수들의 조직적인 금지약물 복용을 묵인한 혐의로 프랑스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달 독일 스포츠용품 회사 아디다스는 IAAF 후원이 기업이미지에 부정적 이미지를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후원중단을 결정했다. 최대 스폰서 아디다스의 후원 중단으로 IAAF는 3천만 달러(36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손해를 볼 것으로 추산된다. 스위스 식음료회사 네슬레도 아디다스와 마찬가지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IAAF 어린이 육상 프로그램 파트너십을 당장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아디다스와 네슬레의 전격 후원 철회 결정으로 IAAF는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됐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5/0200000000 KFR20160125020800007.HTML>

스위스 금융그룹 UBS, 자금도피·탈세방조 행위로 6조원 벌금 위기

세계 최대의 자금운용기관인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프랑스에서 불법으로 고객을 유치, 스위스 계좌를 개설해 자금도피와 탈세를 방조한 죄목으로 엄청난 벌금을 물 위기에 처했다. 2013년부터 스위스의 UBS 본사와 프랑스 자회사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아왔다. 프랑스 당국의 추산에 따르면, UBS의 불법 고객 모집으로 프랑스에서 빠져나간 전체 자금이 130억~230억 유로에 달한다. 만약 UBS측이 불법 고객 모집과 자금 도피 및 세탁 방조, 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48억 8천만 유로(약 6조원)의 기록적인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부정자금의 도피처로 인기를 끌어 온 스위스 비밀 금고의 문이 열리면서 전 세계 계좌 소유자들에게도 불안감을 미칠 전망이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9/0200000000 KFR20160219125800009.HTML?from=search>

국내행사 국외행사

기업시민컨퍼런스(Corporate Citizenship Conference)

글로벌 기업의 CSR 핵심 임원들이 기업시민 전략과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기업시민의식을 실천하기 위한 성공 요소를 공유할 예정

- 주최: Boston College Center for Corporate Citizenship
- 일시: 3월 20-22일 - 장소: Omni Atlanta Hotel at CNN Center, Atlanta, GA

2016 미국 책임경영컨퍼런스(Responsible Business Summit USA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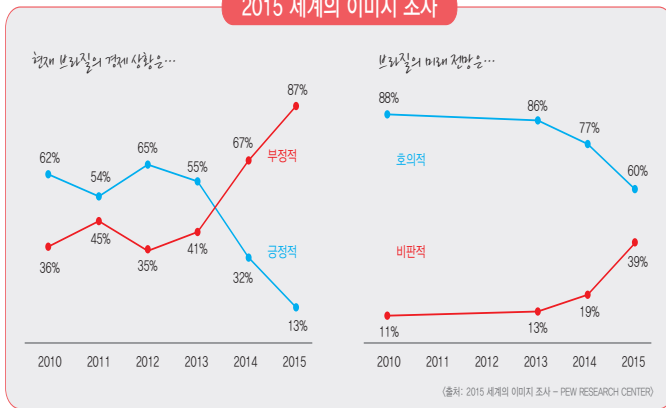
기업 대표들과 기업의 발전 및 협력방안을 구상하고, 여러 이슈에 대한 원탁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

- 주최: Ethical Corporation - 일시: 4월 12-13일
- 장소: Affinia Hotel, Manhattan NYC

페트로브라스 뇌물스캔들과 브라질 부패방지법

브라질이 정치부패, 경제위축, 높은 사회보장비 지출,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락의 4중고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인구 2억 명의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마이너스 성장의 연속으로 사상 최대 재정적자를 기록했고, 채권은 정크(투기) 등급이 되었으며, 실업률도 올해 12%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현 상황의 직접적 원인은 브라질 GDP의 13%를 차지하는 최대 국영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에서 발생한 부패스캔들이다. 1953년 설립된 페트로브라스는 석유생산량이 브라질 전체생산의 93%, 직간접 고용 인력이 40만 명에 육박하는 중남미 최대기업이다. 정경유착이라는 부패스캔들이 국가의 총체적 위기상황으로 번질 수 있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페트로브라스 비리사태다.

2015 세계의 이미지 조사



페트로브라스 부패스캔들의 성격

2014년 브라질 연방경찰은 페트로브라스가 대형건설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고, 자금을 세탁해 정치권에 전달한 혐의를 밝혀냈다. 수사과정에서 페트로브라스 임원으로 재직했던 코스타는 수백억 달러를 빼돌려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제공했고, 그 속에는 집권 노동자당 소속 상원의원 13명과 하원의원 22명, 주지사 2명이 포함돼 있었다. 게다가 전·현직 대통령의 부패 연루 가능성마저 제기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요구로까지 이어졌다.

페트로브라스 부패스캔들로 인해 정부-기업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브라질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났다. 정치권 부패가 경제적 부패와 직접 연결됐고, 개인의 단순한 권력 남용 여파를 넘어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켜 마침내 국가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탄생

브라질이 그 간 민주화 및 경제안정화를 추진했고, 건전한 거버넌스 담론을 통해 부패방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패스캔들이 끊이지 않았던 것은, 부패에 대한 책임과 이것을 강제하는 방법이 효과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 부패 연루자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는 재판을 끝까지 자유롭게 생활한다. 이런 폐단 때문에 부패행위를 한 기업에 책임을 묻는 부패방지법이 새롭게 제정됐다.

부패방지법은 주요 규제대상이 기업이므로 청정기업법(Clean Companies Act)으로도 불린다.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국내외 공직자 매수의 불법행위를 한 법인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브라질 부패방지법의 특징과 핵심내용

부패방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인의 부패행위에 대한 민사 및 행정상 처벌을 강화해, 부패법인의 강제해산까지 가능하게 만든 점이다. 또한 기업이 자체 부패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할 경우, 설사 부패행위가 발생해도 처벌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다. 이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불법행위를 예방·적발하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브라질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영인이나 관리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어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에게서는 결과에 기초해서 객관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행정제재로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의 액수가 엄청나며, 별도로 법인에게 민사제재 조치도 내릴 수 있다. 또한 부패로 처벌된 기업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기업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들었다. 부패행위를 인지한 주무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별법에 따라 형사, 민사 및 행정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계기관이 적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글로벌 트렌드인 부패방지법의 긍정적 효과

과거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개인만이 기소될 수 있었지만 부패방지법은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할 대상을 규정해 놓았고, 그 준수규정과 처벌규정이 대단히 강력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투자를 해야 한다. 기업들은 금지행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자들을 교육시킬 뿐 아니라, 정기적인 감독시스템을 도입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페트로브라스 부패스캔들은 브라질 기업들에게 투명성과 비리척결의 소중함을 교훈으로 남겼다. 부패방지법의 제정으로 투명성이 강조되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된다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리 및 부정부패가 척결되어 '브라질코스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3년 전부터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국 등 브릭스(BRICs) 국가에서도 부패방지법 관련 소식들이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부패방지법 집행의 세계화 추세는 기업의 반부패 조사 및 컴플라이언스 접근법에 중요한 함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핵심 트렌드이다.

윤리경영 스터디

뇌물방지 경영시스템 BS 10500

뇌물이 윤리경영을 가로막는 부도덕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지만, 세계은행 추산에 따르면 매년 뇌물로 지출되는 총액이 전 세계 GDP의 약 3%가량인 1조 달러에 달한다. '비즈니스 성사를 위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기 위해' 필요악처럼 뇌물이 용인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투명성기구(TI) 조사에 따르면, 경쟁사의 뇌물제공 때문에 경쟁에서 불리해졌다는 응답이 27%에 이른다. 이처럼 여전히 존재하는 뇌물은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투자를 위축시켜 마침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 된다.

뇌물방지 국제협약과 영국 뇌물방지법



뇌물수수를 범죄로 인식하고 효율적인 뇌물 척결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여러 국제협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UN 반부패협약과 OECD의 뇌물방지협약이다. 많은 국가들이 뇌물수수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하고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자체적으로 부패방지법을 강화하는 추세다.

영국은 기존 뇌물관련법을 한층 강화시킨 '뇌물방지법'을 2010년에 제정했는데, 부패관련 입법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고 알려져 있다. 뇌물제공자뿐만 아니라 조직에도 그 규모에 상관없이 뇌물예방관련 책임을 묻는다. 따라서 평상시 뇌물위험 진단, 내·외부 교육, 모니터링 및 감독 등 뇌물방지에 대한 적절한 절차를 갖춘 기업들만 기업의 예방실패 책임에 대한 면책권을 가질 수 있다.

영국과 교역하는 기업은 뇌물방지법 이행지침에 주목, 영리조직이 따라야 할 뇌물방지절차 6대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

- (1) 위험도에 비례하는 절차: 당면 뇌물위험 및 사업 활동의 속성·규모·복잡성에 비례하는 부패방지 절차의 수립 및 운용
- (2) 최고경영진의 결단 및 실천: 이사회, 기업소유주 등의 뇌물불허 및 예방 의지
- (3) 위험성 평가: 내·외부의 잠재적 뇌물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그 속성과 범위 평가 (정기적인 위험진단 및 부패방지노력 기록)
- (4) 상당한 주의 의무: 제3자 대리인에 대한 실사
- (5) 의사소통(교육훈련 포함):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한 회사의 부패방지정책 공지
- (6) 감독과 심사: 관련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독 실시

BS 10500의 특성과 이점

영국표준협회(BSI)는 뇌물방지법 2010을 바탕으로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 요건들을 규정한 BS 10500을 개발했다. BS 10500은 비즈니스에서 부패와 뇌물수수 관용 정책의 위험성을 초기에 식별해, 적절한 뇌물방지 통제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S 10500의 도입을 통해 조직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조직운영의 모범관행을 따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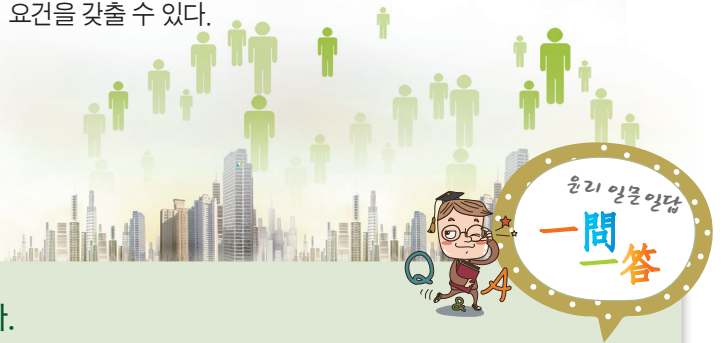
BS 10500은 모든 규모/부문/지역의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조직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뇌물수수방지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표준은 항공우주/화학/건설/군사/공학/의료/광업/제약/전기·가스·수도 등의 공익사업과 같이 커다란 리스크에 노출된 산업종사자들에게 도입을 권장한다.

BS 10500은 정책, 절차, 관리 및 통제 활동을 위험성에 기초해 실행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조직들이 각 조직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BS 10500의 구현은 모든 조직에서 뇌물과 부패 위험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BS 10500은 계획(Plan), 실행(Do), 평가(Check), 개선(Act)의 PDCA 모델을 따라 뇌물방지 경영시스템(ABMS)이 구체적으로 작동한다.

BS 10500은 기업에게 신뢰와 명성 그리고 더욱 활발한 비즈니스 환경과 뇌물방지 경영 시스템 구현을 위한 실천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것이다. BS 10500 인증기업은 윤리적 기업으로서 공인될 수 있고, 기업 경영인은 뇌물방지 절차 및 활동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며, 고객 및 투자자, 시민사회 등 다양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사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높은 신뢰 속에 전달할 수 있다.

BS 10500 인증기업은 비즈니스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공급채널에서 뇌물과 부패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윤리조직으로서의 평판이 높아져 노동시장에서도 비고유위를 점할 수 있다. 또한 뇌물 및 부패 문제를 중대한 경영관련 이슈로 여기는 경영환경에서 비즈니스 수행 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고, 공공·민간입찰 참여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갖추 수 있다.



어쩌다가 거래처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됐습니다.

이를 곧 후회하고 거래처에 받은 금품을 돌려주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인가요?



일단 자기 것으로 하려는 생각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라면 뒤에 이를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즉, 금품을 주머니에 넣거나 서랍 또는 예금계좌에 보관한 후 반환하는 등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 놓고 간 것을 발견한 경우, 인지 후 즉시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 참조 : 대한상공회의소 윤리경영 100문 100답

윤리 수다

함께하는 윤리경영



과거와 달리 현재의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한 기업이 아무리 윤리경영에 힘쓰더라도 하도급업체의 비리나 기업이 속한 국가의 낮은 청렴도가 그 기업의 윤리성을 낮게 평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 민간단체 등은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함께 사업을 기획하고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의 윤리경영 활동

정부의 정책은 기업의 윤리경영에 큰 영향력을 갖는다.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협력은 동기부여와 참여도 증대의 면에서 큰 효과를 낸다.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

2013년 7월, 권익위와 전경련의 업무협약(MOU)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윤리경영 실천 사례집 '윤리경영! 그 길을 묻다'가 출간되었다. 권익위와 전경련의 협업으로 출간된 이 사례집은 민간과 공공분야로 나누어 다양한 업종, 다양한 방면에서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검토·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기업과 기업간의 윤리경영 활동

기업은 다른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해 알가알부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라나 플라자 참사

패스트패션 업체의 하청 의류납품공장이 입점한 라나 플라자. 이곳은 붕괴위험이 있었지만, 공장주는 촉박한 납품 기일을 어길 경우 발생할 손해가 두려워 공장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의류공장의 여공들이었다. 이 사건으로 공장주는 물론 패스트패션 업체 역시 하청업체에 대한 무관심으로 질타를 받았다.

I공사와 이해관계자의 윤리경영

I공사는 업의 특성상 45개가량의 아웃소싱 업체들과 한 공간에서 일을 한다. 때문에 I공사는 아웃소싱 업체들과 함께 윤리경영을 실천하고자 UN글로벌컴팩트를 보완한 I공사 Clean Compact를 만들었다. 이 서약문은 강제력은 없지만, '윤리경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공유토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의 윤리경영 활동

부정부패를 접해왔던 시민들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부와 민간단체(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윤리경영 활동을 시행하는 것이 있다.

민·관협력 네트워크(BNI)

2015년 10월 B시 투명사회실천 민·관 네트워크 출범식이 열렸다. B시 관련 45개 기관과 87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본 협력체는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다함께 더 맑게, 우리가 함께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란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수기관 탐방 및 교류, 반부패 전문교육 인력 양성, 뉴스레터 발간 등 공동캠페인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스타벅스 vs 에티오피아

2006년, 에티오피아 정부는 자국커피에 상표권을 등록해 자국 커피생산농가 수익을 올리려 하였다. 그러나 스타벅스가 상표권 사용료가 부담스러워 이를 거부하자, 옥스팜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나섰다. 그들은 스타벅스가 원두 값으로 폭리를 취한다며 커피생산농가를 위한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스타벅스는 상표권의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대신 에티오피아산 커피 값을 높일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에티오피아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기업윤리 브리프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닌 것은?

- 1) 공익신고자의 신분 등 비밀을 공개할 경우 벌칙 부과
- 2) 공익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벌칙 부과
- 3)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할 경우 벌칙 부과
- 4)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협조한 경우 벌칙 부과

● 지난 호 정답 : 1번, 고객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장준용 주무관(gukmin@korea.kr)

※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4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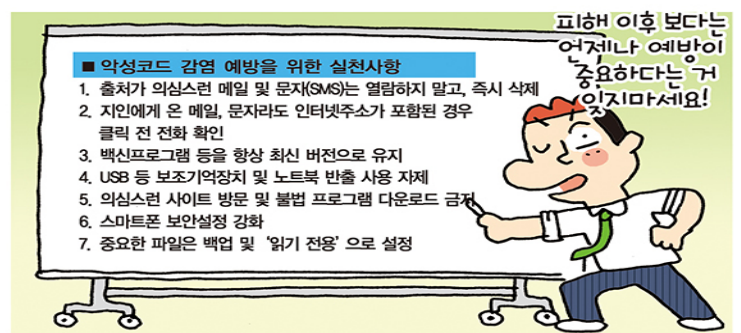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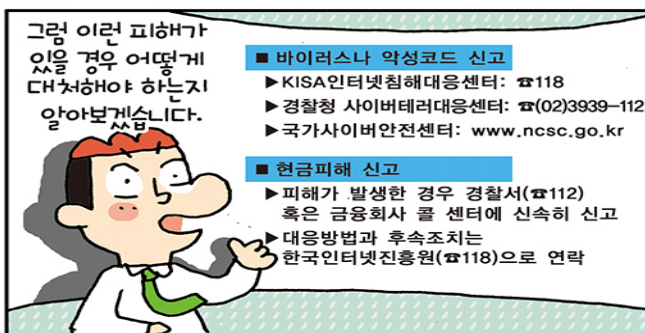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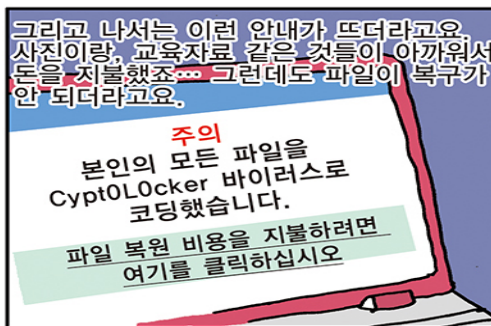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한현동님, 김성인님, 장채순님, 윤상은님, 김성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보안 뉴스~!



자료: 교보생명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 분야

- ① 복지분야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③ 농·축·임업분야
- ④ 교통분야 ⑤ 교육분야 ⑥ 체육분야 ⑦ 문화예술분야
- ⑧ 노동분야 ⑨ 산업분야 ⑩ 기타(환경·해양수산)분야

• 기간 : 2016. 2. 1. ~ 4. 30.

• 신고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110)

